

# Japan Weekly Digest

2011. 11. 19. ~ 11. 25.

☐ 금주의 이슈

- 엔고 장기화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일본정부

☐ 일본기업전략

- 동해카본, 포스코와 합작 고성능 흑연 일관생산
- 도요타자동차, 독일 BMW사와 제휴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기업의 전력판매 촉진 자가발전 확대
- 일·중 물류정책대화 결과 발표

☐ 보고서 리뷰

- 『100조엔에 육박하는 사회보장금부의 배경』,  
제일생명경제연구소, 11월25일



**대한 한일경제협회**

**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**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◆ 금주의 이슈

### □ 엔고 장기화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일본정부

#### ○ 흔들리는 「국가펀드」 구상

- 민주당에서 엔고 대응책으로 구상한 것이 「국가펀드」 설립임. 이것은 외화준비금의 일부를 모체로 하는 펀드구상이나, 그 상당부분이 정부단기증권(FB)과 같은 일종의 차입금의 성격을 띤 외화준비금을 가지고 적극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일본 재무성이 강하게 반발, 결과적으로 절충안으로서 지난 8월에 발표된 것이 「엔고대응긴급기금」임
- 이후에도 엔고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펀드구상의 제2탄으로서 부상한 것이 연금자금으로 113조엔에 달하는 「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(GPIF)」 자금을 일부, 해외투자자금으로 사용케하여 엔매도/달러매입→엔고 진정을 기대한 것임
- 그러나 이것도 당내 일부의 반발로 물밑에서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최근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지출 증가를 보전하기 위한 소비세 인상을 결정한 상황에서 그 재원인 연금을 리스크가 높은 해외투자자금으로 사용케 하는 것에 대하여 야당이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임

#### ○ 통화 거래세, 엔 차관 등으로 엔저 유도

- 이러한 가운데 표책으로 부상한 것이 통화 거래세로 국제적인 자본 이동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원을 개도국의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「국제연대세」의 하나로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G20에서 논의된 바 있는 「토빈세」나 최근 월가 데모에서 화제가 된 「로빈후드세」와 거의 같은 기능의 세제임
- 그러나 실무적으로 과세방법 등에서 매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당내 논의가 극히 일부에 그쳐 실현가능성이 낮음. 최근 일본 외무성이 「국제개발연대세」의 신설을 요구한 바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임
- 나아가, 현행 엔차관을 확대하여 아시아 지원과 엔고 시정,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는 제안도 유력한데, 이는 엔화환율의 하락을 선행시키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임
  - 장기 저리융자인 엔 차관이 증가함에 따라 엔화자금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외화자금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엔화 매도가 발생
  - 이에 비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에 상환하기 위한 엔화자금으로의 전환은 십수년 후에 이루어지게 됨

## ◆ 일본기업전략

### □ 동해카본, 포스코와 합작 고성능 흑연 일관생산

- 일본 동해카본사와 한국 포스코가 태양전지재료 제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흑연을 생산, 판매하는 합작기업 설립에 합의. 2014년까지 한국에 연간생산능력 4천톤 공장을 신설
- 동해카본은 한국자회사에서 흑연을 가공하고 있는데, 전력요금 등이 저렴한 한국에서 소재도 조달하여 일관 생산할 경우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엔고로 인한 채산성 악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
- 신설 합작기업은 등방성흑연이라는 고성능 소재를 한국내 가공공장에 공급하게 되는데, 총투자규모는 1,800억원, 출자비율은 포스코 산하 화학메이커인 포스코케미칼이 60%, 동해카본이 40%
- 합작기업에는 동해카본이 제조기술을 제공, 포스코가 원료를 공급. 등방성 흑연은 태양전지나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잉곳트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용기의 소재로 뿐만 아니라 발광다이오드소자 제조시 소모성 부자재로도 쓰임
- 등방성 흑연메이커는 세계에서 5~6개사 정도이며, 동해 카본은 세계시장점유율 20%이상으로 세계 제2위

### □ 도요타자동차, 독일 BMW사와 제휴 교섭

- 도요타자동차가 자동차의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유럽시장에서 판매력 강화를 위해 독일의 BMW사와 제휴, BMW사로부터 디젤엔진을 공급받는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
  - 작년, 유럽시장의 자동차판매대수 1,700만대 중 도요타자동차의 판매대수는 80만대에 불과, 도요타자동차가 유럽시장의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BMW의 디젤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를 투입함으로써 판매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
- 도요타자동차는 이제까지 환경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왔으나 개발비용부담 때문에 라이벌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성장전략으로 전환
  - 또한, 도요타는 최첨단 하이브리드 기술분야에서도 BMW와 제휴교섭을 추진하고 있어 양사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

## ◆ 경제산업성 동향

### □ 기업의 전력판매 촉진 자가발전 확대

- 경산성은 기업의 자가발전설비 이용 촉진과 신규 진입하는 전력회사의 도매판매 확대를 목표로 현행 제도를 개선,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. 전력회사에 도매 판매시 사실상 1개사에 대해서만 공급할 수 있게 되어있는 제도를 바꾸어 여러 회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함
-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없이, 업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제시
- 일본의 전체 자가발전설비의 발전용량은 5,373만kw이나 현행 방식으로는 비용이 중복되어 판매전력이 한정되어 있었으나,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지금까지 가동하지 않고 있던 자가발전 전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됨
- 철강회사 등 독립계 발전업자(IPP)가 다수의 전략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, 야간 등 미활용 시간대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. 자가발전에 참여하는 기업이 판매처의 수요에 대응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, 전력회사에 지불하는 페널티요금을 절반정도로 인하

### □ 일·중 물류정책대화 결과 발표

- 경산성은 일·중간 서플라이 체인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작년 6월에 개최된 바 있는 제1회 일·중물류정책대화에 이어 제2회 정책대화를 11월 17일 개최
- 제2회 정책대화에서는 ▷물류시스템의 표준화·그린화, ▷물류원활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짐
- 경산성은 중국측에 물류자재(파레트 등)의 리터너블(재활용)화, 품질 등을 포함한 규격의 표준화 및 보급을 위한 대응 필요성을 설명
- 특히, 일본에서 수출할 때 이용되는 물류자재를 중국에서 반복적 이용, 중국에서 일본으로 재수출을 위한 통관제도의 검토를 위해 관민합동 워킹그룹(WG)설치 등을 제안, 중국측으로부터 전면적인 합의를 도출
- 물류원활화와 관련, 일본측은 세관의 무역절차 간소화 현황과 함께 향후 조치 등을 소개하는 동시에 한·중·일 간 협력을 통해 절차 개선에 관한 협의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

## ◆ 보고서 리뷰

### 『100조엔에 육박하는 사회보장급부의 배경』

제일생명경제연구소, 11월25일

#### □ 일본의 사회보장 급부

- 일본의 2009년도 사회보장급부액은 100조엔에 육박
  - 연금급부 증가와 고용·소득환경 악화로 인한 고용보험 및 생활보호의 급부 증가, 간병보수의 증액개정에 따른 간병보험급부 증가 등이 사회보장급부 증가의 주된 원인
- 사회보장재원 중 연금이 10.8조엔, 의료가 13.5조엔, 간병이 3.6조엔 등 국고에 의존. 최근 보험료 인상이 되고 있으나 고령화, 경제성장 등에 따라 급부액이 증가하는 경우 국고부담이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
- 정부예산과 사회보장관련 지출의 관계를 보면, 1990년~2011년 기간중 500조엔 증가한 국공채잔고중 사회보장관련 지출증가로 인한 요인이 165조엔으로 세수 부족 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큼

#### □ 재정건전화와 사회보장관련 지출

-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출삭감이나 세수증가 또는 쌍방의 조합이 필요한데, 1990년 세제 개정으로 인해 감소된 세수의 증가와 함께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로의 개혁이 필요
- 사회보장·조세일체개혁안에 따라 일본정부가 소비세율 인상 관련법안을 준비하는 한편, 후생노동성에서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관한 논의가 진행중임
  - 2025년까지의 사회보장급부 전망에서는 연금급부액은 GNP대비 비율이 저하되는 한편, 의료비는 경제성장이나 기술진보로 확대가능성이 있음

#### □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화된 개혁 방향

- 사회보장과 조세의 개혁은 격차확대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의 감소를 줄이고 잠재적인 내수개발에 필요한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플러스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

## 【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】

(1) 『무역자유화와 아시아경제권』 소지츠종합연구소, 11월 19일

\*출처: <http://www.sojitz-soken.com/jp/send/tameike/pdf/tame481.pdf>

(2) 『일본에 있어서 캐쉬리스(cashless)사회의 금후 진전에 관한 조사분석』  
경제산업성, 11월19일

\*출처: [http://www.meti.go.jp/meti\\_lib/report/2011fy/E001270.pdf](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1fy/E001270.pdf)

(3) 『2012년도 관세법개정에 관한 논점 정리』 일본재무성, 11월22일

\*출처: [http://www.mof.go.jp/about\\_mof/councils/customs\\_foreign\\_exchange/sub-of\\_customs/report/kana231121.pdf](http://www.mof.go.jp/about_mof/councils/customs_foreign_exchange/sub-of_customs/report/kana231121.pdf)

(4) 『엔고 메리트가 부족한 이유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11월25일

\*출처: [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kuma/pdf/k\\_1111d.pdf](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kuma/pdf/k_1111d.pdf)

(5) 『동일본 대지진 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: 경제기반재구축과 정책대응』  
경제산업연구소, 11월25일

\*출처: <http://www.rieti.go.jp/jp/events/11111501/handout.html>

(6) 『100조엔에 육박하는 사회보장급부의 배경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11월25일

\*출처: [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rashinban/pdf/et11\\_188.pdf](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rashinban/pdf/et11_188.pdf)